

▣ 유기농업자재 광고표시기준안 공정위에 심의의뢰

- 농식품부, 농관원 등 주관부처와 시안 논의중이나 시행규칙 광고기준이 문제.... 허용물질(원료) 광고기준은 완화(예 : 식물추출물, 미생물, 키토산, 목초액 등의 일반적 효능표현은 허용)
- 유기농 허용물질 광고와 제품광고를 분리=추후 시행규칙을 개정 작물군별 표시를 검토기로 하되 개정전까지는 현행규정내에서 시안 마련 ▶ 농관원에서 공정거래위에 유권해석 요청 시행검토

□ 유기농업자재 원료인 허용물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특성을 광고하는 경우로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 허용 예정

-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논문, 특허등록 등에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명확한 경우로 반드시 해당 출처를 명시하되 해당제품의 원료(허용물질) 함량(%)을 표시
- 문헌 인용시 문헌명, 집필자(연구자) 성명, 발표 연월일 등 세부적인 근거 명시
(예시) 유기농업자재 00제품의 원료인 00허용물질은 00(논문번호, 특허등록번호, 공공기관 00연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00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00제품의 0%를 차지하고 있다. 00(문헌명)은 00가 연구한 것으로 00.0.0.에 작성된 것임.

※ 농관원이 다시 시안을 보완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정위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하되 향후 광고 개개 문구에 대해 정부 방침내에서 “한친농 자율심의규정”을 마련 시행

● 9월 16일 비료공정규격 개정내용 재검토 필요

○ 아주까리박중 리신기준 설정당시 농진청 사전분석치와 실제 업체 의뢰분석결과 괴리....개인분석오차인지 분석법이 명확히 확립된 것인지 다시 따져보아야

- 농진청은 지난 9월 16일 리신 분석법과 허용기준 등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했다. 설정논의과정에서도 과연 보통타당한 합리적인 분석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규제하는 국가가 몇나라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최근 일부 업체가 국내유일한 분석기관에 의뢰분석한 바 문제가 많다고 한다. 분석법이 개별사안마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개인 분석오차인지 명확치가 않다. 설정전 유통제품에 대한 사전분석결과 현행기준 정도라면 문제될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만약 지속적 문제가 될수 있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크다. 도입시 약속대로 실용화재단의 분석기기와 분석법이 확립되면 시행하고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잔류농약 검출중심 친환경인증시스템 개선돼야**

- 농약 검출량 따지는 대신 유기농업 활성화부터...

박완주 의원·경실련 공동주최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국회 농해수위 소속 박완주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업계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는 현행 분석중심의 인증시스템을 선진국처럼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에 초점을 맞춘 참가형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시스템을 의미하는 자주인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검사 확대-징벌 강화'로는 안전먹거리 생산 어렵다. 생물 다양성생태계 보존 등 생산과정 점검에 무게중심 뒤야 하고, 비의도적 인증 위반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정부안보다 3조186억 늘려 의결... 예결특위 조정여부가 관건**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단위:억)	정부안	중역부	국회수정안
농자재 관리 및 평가	73억2900만	186억4000만	259억6900만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120억9100만	26억5200만	147억4300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259억2000만	50억	309억2000만
농업전문인력양성	157억4000만	66억9400만	223억9800만
신기술보급	396억7300만	47억	443억7300만
농산물소득조사분석	12억7000만	73억7100만	86억4100만
원예특작시험연구	595억1600만	10억	605억1600만
축산시험연구	452억5300만	10억	462억5300만

국회 농해수위가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보다 약 2조25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6조7459억원으로 수정돼 예결위심사로 넘겨졌다. PLS관련 농진청예산도 대폭늘었다. 쌀 생산조정제 지원 단가를 인상(340만→400만원/ha)하고, 정부 양곡매입비와 관리비도 1399억원과 669억원 증액했다.

공익형직불제도 대폭 확충했다.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단가인상 872억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을 각각 263억원, 140억원 증액했다.

●**김영란법가액 3만→5만원(식사)·5만→10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내년 설이전 상향조정→농축수산물 판매활력 찾을듯**



○이낙연 총리는 19일 수확기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를 찾은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예외 적용에 관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이전'으로 개정시기를 못 박으면서 현재 3·5·10만원(경조사)인 가액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기농업 기술위원회서 유기농업자재 관리강화방침 발표**

- 유기농자재 비전문가들이 관리대책 논의? 관계전문가와 논의해야-

◎환농연과 농과원등 친환경농업관계자들이 제26차 유기농업 기술위원회를 화성시 (주) 화성한과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기농업자재 관리 발전방안, 친환경 유정란 생산 기술 사례 등 발표를 비롯해 유기농업 발전방안 관련 토의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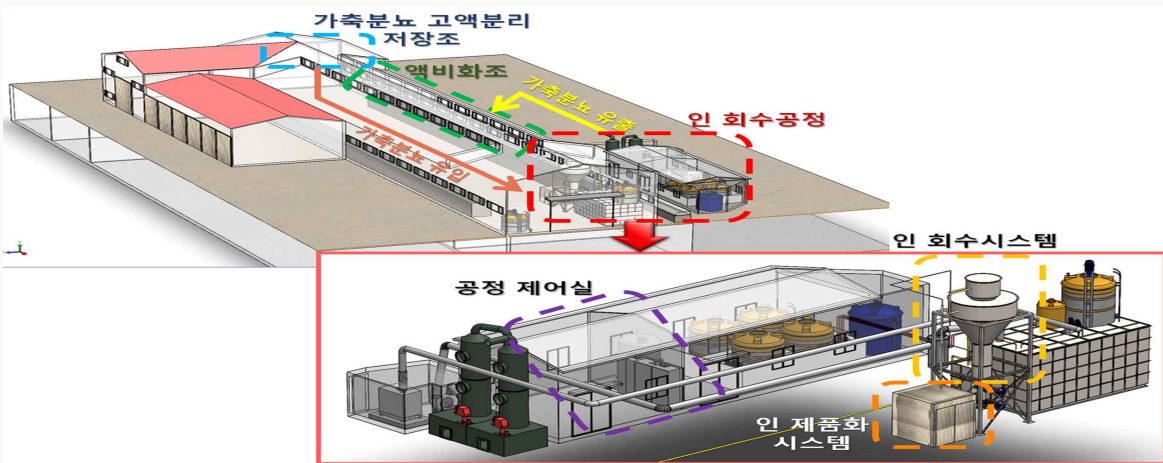
◎농관원인증관리팀 사무관은 농관원의 유기농업자재 활성화 및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제품을 16년 1,495건에서 21년 2,000건으로 늘리고, 부적합 제품비율도 16년 3.1%에서 20년 2%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관리기반 마련 △품질관리 내실화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관련제도개선, 허용물질 선정, 시험연구기관관리, 분석방법 개선과 공시 확대 및 지원강화 정책도 펼 예정이다.

◎특히 공시사업자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 등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분석은 병해충관리용 자재 위주로 하되, 농약 검출가능성이 있는 가축분퇴비, 유박 등을 검사대상에 추가하고, 4,000여 농자재판매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과장 광고도 수시조사도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맨날 사후관리 강화주장에 대해 식상하고, 비전문가들이 유기농자재관리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량 수입 의존 인을 가축분뇨에서 회수하는 방안 검토

- 농식품부, '한국-덴마크 자원순환정책 및 인(Phosphorous)회수기술 워크숍-

가축분뇨 자원화와 양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와 인회수(Phosphorus Recovery)를 활성화하고 양국간 정책.기술 정보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된 식물방역법, 내달 3일부터 시행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에는 △식물 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꼬리표 부착 의무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등 약 11개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친환경농업계, 농식품부와 친환경인증제 개선 논의
농식품부 “제도 개선 시 농민 피해 줄이고자 노력하겠다”**

- 지난달 24일 농식품부에서 전친농, 한살림 등 친환경농업 단체 대표자들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친환경농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의 친환경인증제도 관련 개선안을 비판했다.
- 최근 농식품부의 인증제 개선안 중엔 제재 또는 안전성 검사 강화 위주의 내용이 많았다. 현재 5% 수준인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불고지 조사를 100%로 확대, 생산과정조사 및 안전성검사 강화(연 1회, 1만2,000건 → 연 2회, 3만5,000건), 유통 중인 인증품 대상 안전성검사 확대(연 2회, 1,700건 → 연 2회 3,000건) 등의 내용을 보고,
- 친환경농업 관계자들은 “기존 인증제 자체가 지나치게 검사 위주로 강화됐던 상황에서, 최근의 ‘살충제 파동’을 이유로 인증제도 상의 검사 및 제재를 더 강화하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검사 위주의 현행 제도를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농민단체·윤소하의원 기자회견 “변동직불금감액분, 농가에 돌려라” 쌀값 상승으로 8000억 남아...전액 소득 지원예산 편성해야

- 농민단체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올해 2017년 산지 쌀값이 11월 5일 기준 15만2224원/80kg인데 이 가격이 지속될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당초 예산 1조4900억원에서 6900억원으로 줄어 8000억원이 남게 된다”며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이 전액 농가소득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원성 AI ‘심각’ 단계 격상... 또 전국 방역 비상

국민안전처는 오늘(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관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고창, 순천, 양양 등에서 고병원성 AI (H5N6)를 확진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20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하고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2018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서 12월15일까지 접수, 농가단위→신청필지 단위로 ‘변경’ 관행농민은 지원대상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친환경자조금납부 우선지원

- 또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적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등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경기 농산물 31% 'PLS 부적합'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Positive List System-PLS를 적용하면 올해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했던 경기지역 농산물 중 31%가 '부적합'으로 판정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9월까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내였던 농산물 607건에 대해 PLS를 적용하면 189건(31%)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 ◎부적합이 많아지는 농약 성분은 프록시미돈(85건), 디니코나졸(22건), 다이아지논(20건) 등이고, 참나물 46건, 시금치(16건), 무(15건), 숙갓(13건), 들깻잎(11건), 돌나물(9건) 등이다.
- ◎ PLS는 국내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 성분에는 모두 1kg당 0.01mg 이하를 적용한다. 현재는 견과실종이나 열대과일류에만 시행하지만, 내년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한다.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서명 340만명 돌파



17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 340여만명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

- ◎농협중앙회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을 1일 시작한 이후 1000만명 서명운동에 340여만명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5일 200만명을 넘긴 후 불과 2일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라고 한다.

◎항공방제 농약 비산에 인증 취소



강풍 불 땀 항공방제 삼가야 함에도 방제 ...농가 피해 발생,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현 규정상 인증 취소 불가피" 피해농가 "행정심판 제기할 것"

- ◎김포시에서 무농약 인증 미나리 재배를 해 온 S씨는 지난 9월 26일 무농약 인증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약 한 달 전인 8월 31일 S씨의 미나리밭에서 농관원이 채취한 시료로부터 농약이 검출됐다는 게 농관원의 조사 결과 내용이었다. 신씨는 "단 한 번도 농약 친적이 없다"며 항의했다. 인증 취소 통보 두 달 전인 7월 25일 있었던 김포시의 항공방제가 유력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 과정에서 S씨의 무농약 재배 미나리밭에도 농약이 상당량 혼입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의도적 농약검출 기준완화 목소리가 높다

◎꿀벌 중독물질 검사대상 , 농약 8종→44종으로 상시검사 확대 적용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1월 중순부터 꿀벌 중독물질 병성감정으로 의뢰되는 상시검사대상을 기존 8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실시

- ◎ 꿀벌 중독 원인 물질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다. 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검사 물질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꿀벌 중독물질 44종에 대한 동시 다성분 분석법을 개발, 올해 상반기부터는 병성감정이 의뢰된 꿀벌의 중독물질 검사에 시험적으로 적용했다.

○꿀벌 중독물질검사 44종에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5종(아세타미프리트,클로디아니딘, 이타클로프리트,이미다클로프리트, 티아메톡삼)과 유기인계 27종(다이나지논, 페니트로티온, 클로르피리포스 등) 등이 포함됐다

**●계란 검사항목 확대 뒤 또 부적합...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 점검
지난8월 살충제 파동으로 촉발된 계란 안전성검사 연말까지 지속 전망**

○검사항목 확대 이후 실시된 계란 수거·검사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검출돼 산란계 농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8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살충제 검사항목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된 뒤 실시됐으며 피프로닐 설폰 역시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됐다.

● 유통기한지난 고춧가루에 잔류농약 성분 검출



**"올가을 김장시 김장재료 조심" 절임배추로 속여 판
업자 적발**

○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거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김장재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3~17일 경기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 267 곳을 단속,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친환경 버섯 재배에 유용한 미생물 7종 개발

-병 방제효과 뛰어나 미생물 살균제로 활용성 우수 -

○농촌진흥청은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버섯에 큰 피해를 주는 세균병과 곰팡이병을 방제할 수 있는 항균 미생물 7종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다. 버섯 병해를 55~78.2% 정도로 높게 방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생물 살균제로서 활용성도 우수했다고한다.

●옥천 버먹노린재로 쌀 수확량 '반감'

**농기센터, 6월경 발생 예찰했으나 방제부실 논란..대책은 고사하고 피해현황 파악도
없어 ... "재해 인정해야"**



충북 옥천군에 먹노린재 피해가 심각하다. 농민들은 먹노린재로 쌀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나 대책은 고사하고 피해현황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시정을 촉구했다. 친환경 버섯재배

농민들은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개소

FTA 시대 대응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보급
농식품부 주관 총 100억원 사업비 투입

◎전북도와 순창군이 친환경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개소됐다. 전북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고 친환경농업의 연구 개발과 교육, 보급화를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친환경농업연구 3동으로 구성됐다.



◎실용화재단, 고품질 유기농업자재 생산관리 세미나

-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시 애로사항 등 토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16일 전북도원 농심관에서 유기농업자재사업자 100명을 초청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추진방향,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관리 이해' 농자재 계통구매 계약 절차 등을 설명에 이어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일부 쌀에서 살충제 검출...허용치 14배 초과

지난 9월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쌀 2,800kg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 기준치(0.1mg/kg)를 14배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KBS보도(11.4)

◎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성분이며,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쌀은 지난 5년간 만3천kg에 달함.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출하시기를 늦춰 자연 감소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보조금 부실평가 2년간 2065억원 지급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주장-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협손해보험, 한국손해사정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불법 무자격자에 의해 손해평가한 보험금이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34개 손해사정법인 중 19개 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조인을 아예 신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법인들도 일부만 보조인을 신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서 전국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올해 19회째 ... 271점 친환경농식품 심사...곡성 '백세미'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금상

농협중앙회와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가 공동으로 '2017년 전국친환경농산물 품평회'를 지난 7~8일에 걸쳐 국회에서 개최했다. 백세미는 금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은 것이다.

● 행사소식

① 첨단농축산기자재박람회(KIAFE)' 농축산분야 융복합 과학기술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첨단농축산기자재박람회(KIAFE)'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총 155개사가 참여해 348개 부스의 규모로 진행됐다. 또 중국,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102개사 해외바이어가 방한해 1:1 매칭을 통한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한친농과 해외바이어 10개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해 일부 성과가 예상된다.

②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 내달 5~7일, aT센터

농기평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미래농업'이란 슬로건으로 '2017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스마트 농업관과 종자생명·청정농업 등 6개 테마별 혁신기술을 보여주는 테마전시관이 운영된다.

③ 국회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토론회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④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난해부터 진주시 직접 운영 비용 줄이고 세외수입 늘려..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에 역점...해외바이어 발굴·유치 '성공적'



경남 진주에서 '2017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개막했다. 21개국 250개사 500부스 규모로 19일까지 9일간 대장정을 마쳤다. 농식품, 농자재 수출상담결과 800만불 계약 성과를 올렸다.

⑤ 2017 김제농업기계 박람회



'2017 김제농업기계 박람회'가 '첨단 농업의 장, 농업의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지난 8일 전북 김제 벽골제에서 열렸다.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가운데 총 2만5620㎡ 규모에 193개 업체가 참가, 경운·정지, 과수용기계 등 다양한 첨단 농기자재를 선보였다

⑥ TAMAS 2017'



글로벌·첨단기술로 새단장했다고 하나 갈수록 시들해 지고 있다. 국내외 210개사 433개 부스, 해외바이어 72개사가 방한 국내업체와 상담했다.

⑦ 2017 제주감귤박람회

2017 제주감귤박람회가 오는 8~12일 닷새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성료됐다. 산업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우수감귤 경연대회, 푸드콘서트 및 농업인의 날, 농협인 한마당, 스타팜의 날 등 날짜에 맞춘 연계행사도 진행되었다

⑧ 잡초학회, '2017년 추계학술발표회' 생태계 교란잡초 방제필요성 강조



지난 10월26일 학회 발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논, 밭, 과원, 목초지 중심 외래잡초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29과 166종이었으며, 이들 외래잡초는 기후변화와 활발한 국제교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관리전략을 수립, 영농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⑨ 농약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농작업자 농약안전성 평가기술선진화" "농약, 비료가 초중고



교과서에 토양과 하천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 폐기물로 표현" 문제 제기(경상대 김진호 교수)

지난달 27~28일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평가 기술 선진화'를 주제로 개최한 '2017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농작업자 농약 안전성 평가기술 선진화와 우리나라의 소규모 농업형태에 맞는 농작업자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편 농약 및 비료가 초중고 교과서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 폐기물 같은 부정적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경상대 김진호 교수는 조사결과를 발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학습시키는 교과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⑩ 유원에코사이언스, 전북 익산공장 준공



유원에코사이언스(주)는 총10,760m² 부지에 30억원을 투입 익산공장은 전멸제초제, 수화제 제조설비와 입상수화제 포장설비 등을 갖췄다. 지난 3월 수간주사제와 유액제 설비를 위한 제조동을 완공한 바 있다.

⑪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장 하마평 무성

농정원장에 안호근 유력, aT 사장에 이병호·김승남, 농어촌공사 최규성 물망
농수산대학 허태웅 거론, 한국마사회는 15일 회장 후보자 모집 공고 26일까지 접수

[해외 단신]

●종자·농기자재·재배기술 한데 묶어 해외로... 생산형 수출모델 뜬다

-원물·가공품 형태로 수출하는 단순 '소비형' 방식에서 탈피

-국내외 지자체간 협약 후 지역 영농조합·자재업체 등 참여시키는 모델이 주류

◎ 농업분야의 수출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생산한 농산물을 원물이나 가공품으로 수출 하던 '소비형'에서 종자와 자재·재배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생산형'이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형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나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자재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의 모델이 주류를 이룬다. 전남 보성군도 이런 모델을 구축하고자 최근 중국의 유명 녹차 산지인 산둥성 일조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의 지원을 통해 생산한 혼합제제·영양제 등을 이용하는 시범 단지를 조성한다.

◎ 최근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산둥성주한경제무역대표처 주관으로 열린 '한·중 안전 농수산물 수출시범단지 건설 간담회'에서도 자재와 기술을 묶어 수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중농업협력사업단 회장은 "수출시범단지는 한국의 우수한 농자재, 기술, 브랜드 가치와 중국의 대규모 농지, 풍부한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서로 (win-win) 하는 모델"이라면서 "산둥성이 구축해온 수출단지 중 우수한 50개를 선정, 한국의 지자체 50곳과 연결해 '한·중 안전농수산물 수출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내년에 완성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친농, 11월27일 베트남 과기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베트남 과기부(기술이전센터 ; VTTC)와 MOU
- 베트남 농산업체와 기술교류 확대 방침
- 베트남 커피, 용과, 바나나 집단농장에 수출추진

◎ 친환경농자재 수출관련 베트남 2군데와 MOU를 맺은 바 있는 한친농/수출조합은 VTTC(베트남 과기부 기술이전센터) Vu Kim Thu 사무관 등 베트남 농산업체대표 12명을 초청해 지난 27일 서울 화훼공판장에서 B2B 미팅을 통해 우리 친환경기술과 자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방안을 논의 했다.

◎ Thu 사무관 등은 "국제 기준에 맞는 수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의 고급 농기자재와 농업기술을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친농은 향후 이들 베트남 VTTC 등 유관기관과 본격적인 수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